
스마트 포용도시 시범구현 사업제안(안)

**GIST블록체인경제센터
국정기획위원회 제출본**

제출자: 이흥노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21.3.18.

분야	디지털·안전망·지역균형	
책임제안자 실무자	이흥노 GIST교수, 인공지능연구소장/블록체인경제센터장 이명은 블록체인경제센터 대외협력팀장	
사업명(과제명)	스마트 포용사회 실증 제도개선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근로가치가 고취되는 스마트 포용도시 건설	
신설/보완 구분	신설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양극화 갈등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의 의미 퇴색과 자산인플레이에 대응할 저축수단의 부재, 근로가치 절하, 부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저출산/인구절벽 가속화, 국가 유지비용 증가 ○ 지식추구 사회로 가치 전환이 절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원천은 지식. 즉, 연구·창업·근로를 통한 지식생산활동이 부를 새롭게 생산하는 활동임. 근로 가치 절상, 중산층 증가, 균형 발전 등으로 사회가치를 전환시킬 필요성이 매우 큼.
	주요 핵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 스마트도시 건설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5G 등 자동화 기반 성장과 효율 추구 중심. 상기한 양극화사회 구조속에서 우수인재의 참여미흡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하는 실정임. 지역 내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양극화가속 우려 또한 존재. - 스마트도시 조성 시 포용정책을 내포한 포용전환 기술 개발과 실증·적용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발전토큰(도시가치연동저축)을 발행하고,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의 조기 참여를 촉진하고자함. 발전토큰은 조성 지역내 대지·부동산 지분과 연동함. 토큰 소유자는 자산인플레이에 대응하는 헤징수단을 갖게 됨. 일하는 사람이 성장한 스마트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당하지 않고 주인으로 성장함. 조성초기 불확실성을 뛰어넘고 도시발전을 위해 초기참여 및 헌신할 동기를 제고함. 다양한 인재의 참여와 헌신으로 스마트도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식생산활동과 근로가치를 고취, 국토균형발전을 추동함.
	법·제도화 및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조성법, 조성 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 등을 개정하여 발전토큰 발행총량과 도시지가상승분과 연동성 강화.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상은 부의 양극화임.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빠르게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음. 고령사회 구조에서, 근로의지마저 약화되고 있음.

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 포용사회로 전환이 필요함. 그러나, 스마트(성장 및 효율)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논의되는 정책은 일자리나누기, 기본소득, 선별지급, 최저임금 등 주요국의 실험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큰 실정이기 때문임.

GIST는 이 문제를 “일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나라”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형국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함. 특히, 교육과 연구 활동을 중시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사회문제를 지식생산의 힘으로 해결하며, 창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칭하여 지식생산자라 명하고 이들의 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자 함.

지방에 조성되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AI/데이터/IoT/센서/5G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임. 계획대로 구현되고 시민이 참여하면, 균형 발전, 안전사회, 친환경도시, 고령사회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

문제는 시민의 참여임. 참여를 독려하고, 지식생산자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토큰과 지대상승분을 연동하여, “일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를 기획, 설계, 실행하고, 성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 포용타운 건설의 시범 사례를 구축하고자 함.

□ 양적완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악화

- (양극화 심화) 유럽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간 전개된 양적완화 규모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19 사태 수습에 동원됨에 따라 절대적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적완화에 따른 실물과 시장 간 괴리로 인해 취약층을 중심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은 증가하는 이른바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대표적 자산시장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러한 자산시장의 과열을 직접 보여주는 양상으로 특히 서울과 지방권 아파트 가격 격차는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향 평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
 -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마련이 시급
- (중산층 붕괴) 기획재정부가 ‘19년도 발표한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위 소득 부근의 인구비중 하락은 OECD 등 주요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전세계적 현상이며, 세계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중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계층 비중은 감소
 -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중산층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전례없는 위기로 발생한 K자 양극화로 산업 간, 계층 간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산층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악화

- (지리적 문제점) 개발연대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도시화,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추구였음. 투기적 도시화로 인한 부의 성장은 수도권 부동산, 대기업의 탄생,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성장의 모든 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됨. 개발의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지 않고 오히려 역류 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의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성장이 침체,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불균형적으로 상승
-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수도권 쏠림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방안으로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유인을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발표

□ 4차 산업혁명과 고용사회 변화

- (일자리 충격) 인공지능 발전과 비대면 및 자동화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으로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 판이 변화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 일자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행정, 회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한국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서 일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능력에 따라 삶의 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 포용사회로의 변화 필요

- UN Habitat III은 포용도시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모든 거주민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규정. 사회가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용도시로의 변화가 필요
-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 설계,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의 기반으로 둬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통합한 살아있는 생활환경임.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완화와 생활환경의 안전, 거주자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포용성과 회복성을 포함해야 함. 이를 ‘스마트 포용사회’로 명명함.

□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 - 프로토콜 경제

- 코로나 19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와 같은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뉴노멀을 형성.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든 산업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초래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활동을 가속화함.
- 언택트에 기반하여 급성장하기 시작한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모델로 프로토콜 경제가 각광을 받기 시작
 -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경제개념으로 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약을 의미. 2021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이 과제로 담김.

<참고> 프로토콜 경제 사례

○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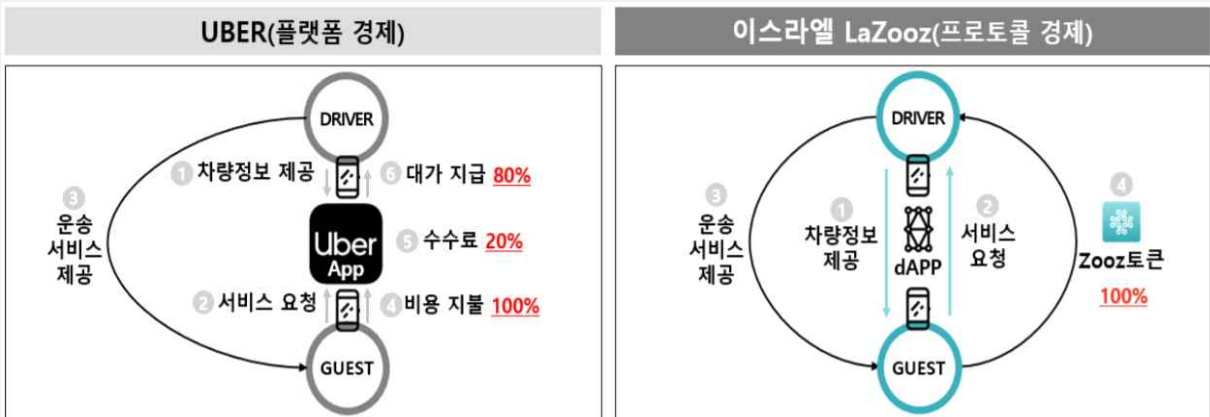
- **KT: 블록체인 기반 ‘할랄 인증 Trust 플랫폼’* 구축**

* 할랄 인증 처리와 발급, 검증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공개

- 쿠팡: 배송인력인 ‘쿠팡맨’ 등 직원들에게 1,000억원 규모 주식 배분 계획 발표
- 코인플러그: 시민참여형 공공안전 제보서비스(앱)를 통해 안전 미션 제보 참여 시 보상획득 및 디지털 바우처(지역화폐)로 교환 가능
- 그린랩스: 클라우드형 스마트팜 서비스로 농업정보 비대면 문제 해결에 착안, 농사에 필요한 정보(날씨, 경락시세, 농사사전, 농산물 거래소, 농산물 상점 등) 제공
- 코드스테이츠: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로 교육과정에 더해 국내 150여개 기업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위-윈(We-Win)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연봉 이상으로 취업 성공 시 기수료한 교육비를 후지불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공유하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선보임

○ 해외 사례

- 에어비앤비: IPO과정에서 비의결 주식 920만주를 숙박공유 호스트에 제공 (숙박 공유 호스트 기부펀드에 기부)
 - Slock.it: ‘잠글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자와 사용자가 직접 거래하며 스마트 계약으로 사용조건을 결정, 사물인터넷(IoT)으로 상품 관리
 - Walmart: 블록체인을 통해 식료품 유통과정 전반을 추적하고 공개하여 원산지 정보를 비롯한 세부 유통과정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
 - Origin Protocol: 블록체인 기반 P2P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직거래를 위한 무료 온라인 스토어 제공
 - **Ub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우버가 드라이버에게 연봉의 15%까지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LaZooz: 차량공유서비스로 dApp*과 Zooz토큰**을 통해 비용 지불(중개 수수료 0%)**
- * decentralized application: 블록체인을 통해 제작·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 디지털 암호화 토큰으로 거래소에서 현금화 가능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프로토콜 경제의 현황(2020.11)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포용성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관계는 혁신과 신뢰, 성장과 분배라고 볼수 있음. 인공지능 발달에 있어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훌륭해도 데이터 신뢰를 못하면 의미가 없음.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와 정책, 의사 표현을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하면서도 변조나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기에 초신뢰 경제혁명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킴.
- 상기 기술된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업계에선 익숙한 개념으로 지난해 급성장한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이 이러한 형태를 띠. 디파이 성장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했던 거버넌스 토큰*이 있음. 즉,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이해할 경우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의 이익 상승을 동반 실현 가능
 - * 거버넌스 토큰: 해당 플랫폼의 운영 정책(프로토콜)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투표권으로 플랫폼이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며 타인에게 금전적 양도가 가능
- 즉,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관계자 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용자가 함께 플랫폼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공정한 분배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확장과 경제적 성장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기술임

- GIST블록체인경제센터는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실증방안으로 ‘스마트 포용타운 시범구현’을 제안함

□ 스마트 포용타운의 추구방향

○ 지식추구 사회로 가치 전환

-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조지 길더(George Gilder)는 그의 저서 「The Scandal of Money」에서 ‘돈’의 의미를 고찰한 바 있음. 부는 화폐를 찍어내 공급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창출되는 것임을 주장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지속해서 학습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고 설명함. 즉 자본주의란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보생산이 사회번영을 만든다는 점으로, 화폐는 가치 있는 것의 척도를 제공하고, 돈은 인류의 시간의 가치와 연동됨을 강조함.
- GIST가 제안하는 스마트 포용사회는 블록체인 공동체 안에 규약을 세우고 미래 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식 생산 활동, 즉 연구·창업·근로를 통해 사회가 진보하고 부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함.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여 일하면 누구나 중산층으로의 진입 및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함.

□ 스마트 포용타운 구현 개요

- 시범 구현 지역: GIST 캠퍼스 및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GIST캠퍼스 및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스마트 포용타운 파일럿 사례를 통해 교육·연구·네트워크 실증이 가능하며 향후 비수도권지역 스마트도시 건설 방안으로 발전 가능

<참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 첨단3지구는 2020.12.31.부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완료
- ◆ GIST는 5년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지립형 인공지능 중심 창업 단지 조성 예정
- ◆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R&D특구 내 조성될 예정
- ◆ 위치 및 면적: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3,616,853㎡)
- ◆ 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공영개발)
- ◆ 관련부서: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 스마트 포용타운 핵심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기반 스마트 거버넌스
- 경제: 타운가치 연동 토큰분배를 통한 프로토콜 경제 구현
- 기술: 인공지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포용 사회 인프라 구현

○ 현재의 혁신단지 단계별 개발 체계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함. 가령, 시청, 기업, 대학, 연구소, 참여자, 토지수용대상자, 입주자, 건설사, 토지주택공사 등
- 단계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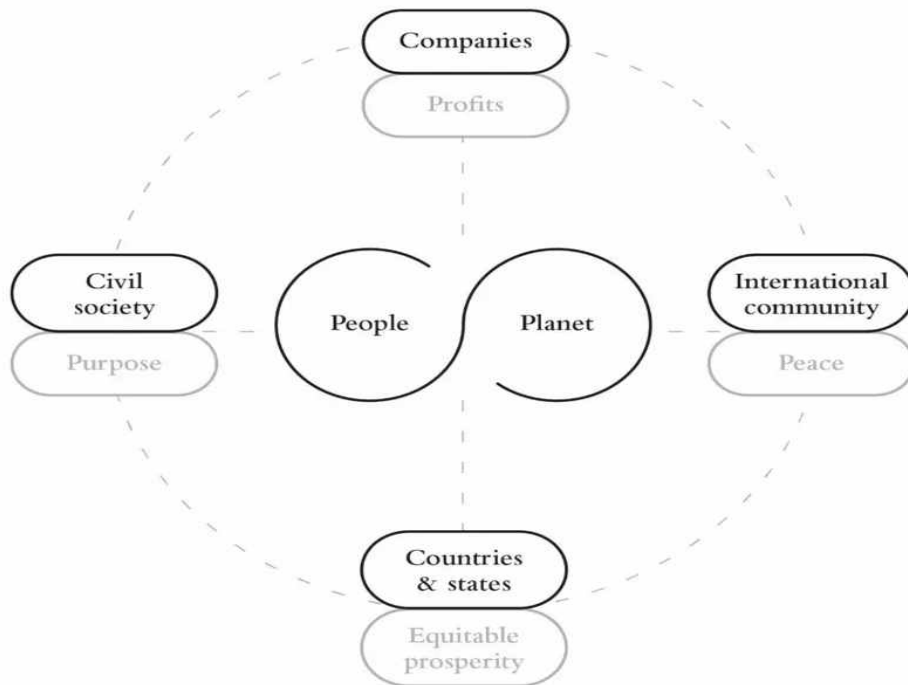
□ 스마트 포용타운 거버넌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반 스마트사회 거버넌스

- 스마트사회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 포용타운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기반으로 스마트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포용타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

- 이해관계자 간 최종 합의는 타운 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며, 합의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은 하기 기술될 토큰발행을 통해 경제·사회의 모든 참여자에게 고루 분배됨. 이러한 순환의 지속을 통해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그림1] 클라우스 슈밥의 글로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출처: 「Stakeholder Capitalism」 (2021.1), 클라우스 슈밥

□ 스마트 포용타운 경제

○ 타운가치 연동 토큰발행

- 경제적·질적 상승효과를 참여 인력에 환류하는 프로토콜 경제 구현
 - 스마트타운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시간에 따른 경제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로서 네트워크 내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 가능한 발전토큰*을 발행함. 발행된 토큰 총량은 사업지역 지대상승분과 연동되며, 타운성공에 중심적 역할을 할 초기참여자·창업가 등에게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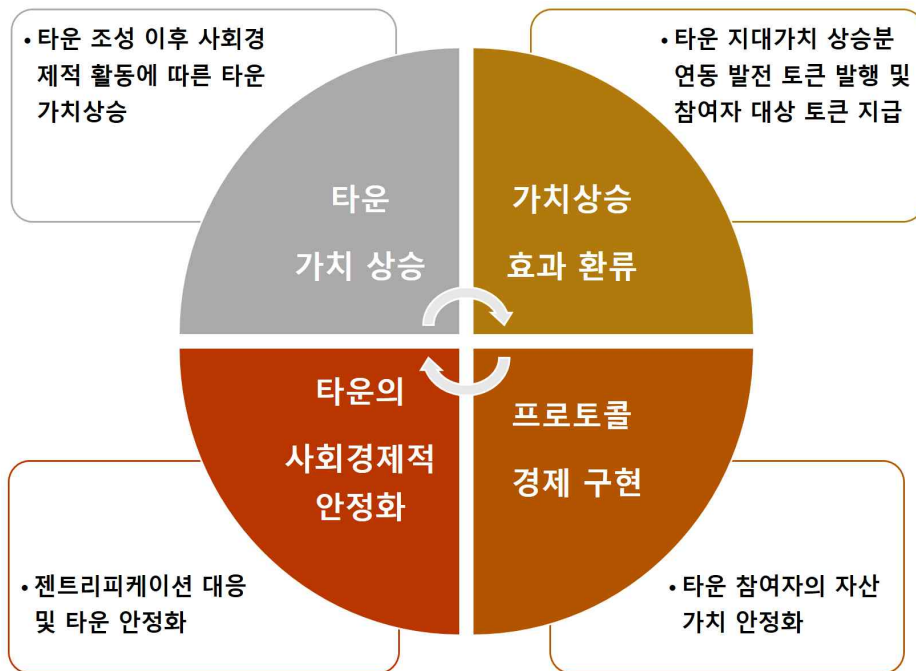
* 발행되는 발전토큰은 스마트타운의 법정화폐가 아니며,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이나 자산형 토큰(Asset Token)과 상이하다.

- 스마트타운 구현 후 블록체인에 기반한 타운 내 토큰의 발행 총량은 한정됨. 해당 발전토큰은 타운의 지대상승분과 연동되어 타운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구현 초기 참여자일수록 많은 토큰을 받도록 구현하여 타운 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참여자에게 환류되도록 함

- 인재 유입 효과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가능

- 토큰은 초기참여자, 우수성과 참여자, 창업가 등에 지급되는 스마트 타운 사업의 지분 혹은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상호 거래가 가능
- 이는 시간에 따른 경제적 인플레이션에 뒤처지지 않는 자산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자 타운 구축 후 젠트리피케이션 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인구 공동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타운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단임
- 토큰발행 및 배분은 자산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징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울타리 효과와 프로토콜 경제 구현을 통한 근로 가치 절상 효과를 발휘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타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의 역할과 지역 이전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우수 인재의 참여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2] 타운가치 연동 토큰발행의 기대효과

○ 토큰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스마트 포용타운이 소속된 지자체 조례 및 특례 개정 등을 통해 토큰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토큰 총량과 지대상승분 연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작업 필요
- 실증 후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을 통해 지대상승연동 토큰발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정책 제안

<참고> 사회적 자산화 추진사례

- ◆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화 부작용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자산화에 관심이 커지며, 주식회사·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부동산(건물)을 공동소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사회적 자산은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행위자가 토지·부동산 소유주의 자산 수익률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
 - ◆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을 준소유하는 사회적 자산화는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형과 공공주도형이 존재하며,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지원이 필수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산화를 추구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가능하며, 공정한 이익 분배가 가능함.
 - ◆ 사회적 자산화 사례
 - 서울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에서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자산 조성’을 역점 추진과제로 상정
 - 영국은 정부와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지역사회 조직이 활용하는 사회적 자산화 지원을 위해 ‘공동체 자산 이전’과 ‘공동체 우선 입찰권’ 제도를 운영
 - 또한, 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의 시민자산화*를 진행함. 시민자산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또는 별도 회사를 세우거나, 민관이 합작하여 회사를 세워 시민 자산화 전략을 취함
- * 시민자산화: 다수 시민이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사용·운영·관리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

□ 스마트 포용타운의 핵심기술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 스마트시티*를 넘어 지속발전하는 스마트사회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결합하여 성장과 효율성(인공지능), 그리고 포용과 투명성(블록체인)을 아우르는 기술구현이 필수

* 스마트시티: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인공지능) 성장·효율 추구 및 생산성 향상 기여

-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 기술이 결합된 ABCD 네트워크를 구성, 타운 내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모델 등은 인공지능 자동학습을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학습을 통해 향상된 사항은 교통신호와 연동된 안전한 도로주행(자동차), 정확한 장소에 배달하는 배달로봇,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및 거래, 행정정보 제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블록체인) 탈중앙화에 따른 모두의 참여와 프로토콜 설정 합의에 따른 포용과 투명성 보장 가능

- 블록체인경제센터는 Blockchain: ETH-ECC, BIT-ECC 네트워크 프로토콜 코어를 보유, 이를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과 합의 프로토콜이 가동되는 네트워크 구성을 테스트 중. 컴퓨팅 파워를 보유한 본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 확보를 통해 실증 대상인 스마트사회의 데이터 축적 가능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후 검토 결과 수신 내용

디지털 뉴딜 신규보완 사업 제안(113건) 검토 내용 회신

(정책기획위) 디지털뉴딜 제안과제 부처 검토내용 회신

보낸날짜:

2021.06.25 06:34:52

사업명: 스마트 포용사회 실증: 제도개선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근로
가치가 고취되는 스마트 포용도시 건설

신설/보안: 신설

담당부처: 국토부

담당과 담당자 성명: 국토부 도시경제과 박00 사무관

분류 1: 정책사업

분류 2: 불수용

분류 3: 불수용

검토의견: 도시와 연동한 자산가치 부여에 대한 관계기관, 지자체, 시민 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